

---

# 사회적협동조합이 알아야 할 법무·법률 분야 기초사항

---

◀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신재윤

❖ Copyright(c) 2022 더함 All rights reserved.

본 강의안에 대한 저작권은 법무법인 더함에 있으며, 사전 허락 없이 복제, 배포할 수 없습니다.

# INDEX

- I. 협동조합의 정의 및 운영원칙
- II. 협동조합 기본법 총칙
- III.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 IV.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 V.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
- VI.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 VII.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 등

# I. 협동조합의 정의 및 운영원칙

# 1. 협동조합의 정의

## ICA의 협동조합 정의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한다.

## 2. 협동조합의 운영원칙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협동조합 7원칙

#### 협동조합 7원칙

1. 가입의 자유 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2. 민주적 관리 Democratic Member Control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4. 자율과 독립 Autonomy and Independence
5. 교육, 훈련, 정보 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Concern for Community

## 2. 협동조합의 운영원칙

### 민법 및 상법상 법인과 비교

|          | 상 법      |          |            |          |             | 협동조합 기본법 |     | 민법           |          |
|----------|----------|----------|------------|----------|-------------|----------|-----|--------------|----------|
| 구분       | 주식<br>회사 | 유한<br>회사 | 유한책임<br>회사 | 합명<br>회사 | 합자<br>회사    | 협동조합     |     | 사단<br>법인     | 재단<br>법인 |
|          |          |          |            |          |             | 일반       | 사회적 |              |          |
| 사업<br>목적 | 이윤극대화    |          |            |          |             | 조합원 실익증진 |     | 비영리          |          |
| 운영<br>방식 | 1주 1표    | 1좌 1표    | 1인 1표      |          |             |          |     |              | 재산       |
| 설립<br>방식 | 신고제      |          |            |          |             | 인가제      |     | 허가제          |          |
| 책임<br>범위 | 유한책임     |          |            | 무한<br>책임 | 무한+<br>유한책임 | 유한책임     |     | 사원의<br>책임 없음 | -        |

## 2. 협동조합의 운영원칙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조직 |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인가   |
| 사업 범위에 제한 없으나, 금융 및 보험업 불가함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주 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어야 함. 조합원 대상으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 가능       |
| 조합원에게 잉여금 배당 가능함   |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배당이 불가함   |
| 해산 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 처분 가능함  | 해산 시 잔여재산은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귀속됨                     |
| 일정규모 이상만 경영공시 대상임  | 모두 경영공시 대상임  |

## 2. 협동조합의 운영원칙

### 협동조합의 상호성

**상호성 = ①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통제 + ② 비이용자의 조합원 가입 통제**

**①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통제: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6조).” “사회적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

**② 비이용자의 조합원 가입 통제: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여야 한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 (ICA 협동조합 정의)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구성원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조)



### 3. 협동조합의 자치 규범

#### 자치 규범의 종류

- 협동조합 기본법상 강행규정 > 정관 > 규약 > 규정
- 정관에 위반하는 내용의 규약은 효력이 없고, 규약에 위반하는 내용의 규정도 효력이 없음
-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협동조합 표준정관은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이므로(법적 구속력 없음), 각 협동조합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정관을 조합 스스로 작성할 필요가 있음

| 결의사항        | 결의방법   |
|-------------|--|
| 정관의 제정 · 개정 | 총회의 특별결의 사항<br>(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 규약의 제정 · 개정 | 총회의 보통결의 사항<br>(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      |
| 규정의 제정 · 개정 | 이사회 결의사항<br>(이사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           |

## II. 협동조합 기본법 총칙

# 1. 협동조합 기본법상 법인의 유형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제115조의8 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법인” (법 제4조 제1항)
- \*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 (법 제14조 제1항)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115조의8 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 (법 제4조 제2항)
- \*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법 제14조 제2항)

## 2. 협동조합 기본법과 개별법의 관계

### 개별 협동조합법

**법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연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산림조합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신용협동조합법
- 새마을금고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3. 일부 법률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 법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13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 "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말한다.

1.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 또는 회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 보험업법과의 관계

##### 법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④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다른 법률의 준용

### 「협동조합 기본법」의 기본적인 준용(準用) 구조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한  
「협동조합 기본법」상 규정



상법 제1편 총칙, 상법 제2편 상행위,  
제3편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  
(내부관계 관련 사항 등)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  
(내부관계 관련 사항)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한  
「협동조합 기본법」상 규정



민법 제1편 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

# Ⅲ.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법 제4장 제1절]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개관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발기인, 설립동의자 모집  
정관 작성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



설립인가,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 5인 이상, 법인도 가능

- 정관, 사업계획과 예산, 임원 선출,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결의  
(단, 법인은 임원이 될 수 없음)

- 인가신청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 인가후 출자금 납입

- 설립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 발기인, 설립동의자 모집

### 법 제85조(설립인가 등)

-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시행령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5인 이상일 것
  - 2. 설립동의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구성될 것

## 발기인, 설립동의자 모집

\*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시행령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따른다.

1.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인 5만원 이상일 것.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인당 최고 출자금인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자산 중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 정관의 작성

### 법 제86조(정관)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해야 함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 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정관상 목적 및 사업 범위의 중요성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함(법 제86조 제3항)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제34조)

- 법인의 권리능력이 목적범위로 제한된다면, 권리능력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벗어나는 행위의 결과는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479 판결)
-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되며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되지 않음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원고(사단법인 OO선교원)의 정관이 선교와 신앙훈련을 중요한 목적사업의 하나로 정하면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부대사업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선교 등을 담당할 교회나 학교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그러한 교회나 학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행위 역시 원고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따라서 원고가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산선교교회나 ◇◇대학교에 부지 또는 건물의 매입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행위는 원고의 목적사업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

### 시행령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

-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 2. 조합원의 자격요건
  -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 1. 정관
  - 2. 사업계획과 예산
  - 3. 임원의 선출
  -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 ③ 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법 제85조(설립인가 등)

-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설립인가

### 법 제85조(설립인가 등)

-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⑥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의 예시(시행규칙 제14조 참조)

- 정관 사본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의사록 사본
- 임원 명부
- 사업계획서, 수입 지출 예산서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별 인수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설립인가

### 법 제85조(설립인가 등)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 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 인가에 있어서의 행정청의 재량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두635 판결

“인가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제3항에 정한 설립요건의 충족 여부는 물론, 나아가 조합 등의 사업내용이나 운영계획 등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이라는 사업자단체 설립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여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가진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할 때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 출자금 납입

### 법 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 ① 발기인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 설립등기

- \*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설립등기시** 성립(법 제106조 참조)
  -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설립인가 연월일
  - 임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단, 이사장 아닌 임원주소 제외)
- \* 신청인 : **이사장**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제출)
- \* 첨부서류
  - 설립인가서, 창립총회 의사록, 정관 사본 (구체적인 서류는 등기소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문의)
- \* 설립등기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은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회계연도 끝난후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 필요

##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IV.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법 제4장 제2절]

# 1. 조합원으로서의 가입, 출자 및 책임

## 가입

### 법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 법 제21조(가입)

- 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해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Q. 일정 지역 내로 가입조건을 제한할 수 있는가?

**설립목적 및 특성**이 지역성을 전제로 한다면 가능함.

(예) 제00조(조합원의 자격) ① **\*\*지역 및 \*\*시 \*\*구** 내에 거소 또는 주사무소를 둔 자로서,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Q. 준조합원의 운용이 가능한가?

협동조합 기본법은 조합원 평등의 원칙을 정하면서도, 농협법이나 수협법 등과 같이 **준조합원 제도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출자좌수 및 의결권 참여(즉, 공익권)와 배당참여(즉, 자익권) 등에 있어 조합원과 다른 지위를 가지는 준조합원 규정은 신중 필요

# 1. 조합원으로서의 가입, 출자 및 책임

## 가입

### Q. 출자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는가?

출자금이 완납되어야만 조합원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각 조합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지위 획득 여부가 달라짐.

따라서 실무상 예상되는 문제점들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제27조, 표준정관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소 1좌 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하여야만** 조합원 지위를 획득할 수 있되, **분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는 시점을 정관상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 1. 조합원으로서의 가입, 출자 및 책임

## 출자 및 책임

### 법 제22조(출자 및 책임)

-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④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Q. 생산자조합원에게만 최소 출자금을 달리 요구할 수 있는가?

(예) 제00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0원으로 한다. 단, 생산자조합원은 10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 Q. 최소 출자금을 상향 변경(정관 개정) 할 수 있는가?

정관을 개정할 수는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조합원이 **소급적으로 추가출자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음**

(예) 제00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0원으로 한다. ⇒  
① 조합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0원으로 한다.

## 2. 조합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

### 의결권 및 선거권

#### 법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Q. 법인 조합원의 직원이 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

법인이 조합원일 경우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그 법인의 대표자에 의해 행사됨. 대표권이 없는 임직원에게 대표권을 위임하는 행위의 법률적 효력은 문제될 소지가 있음.



### 3. 탈퇴 및 제명

#### 탈퇴

##### 법 제24조(탈퇴)

-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 2. 사망한 경우
  - 3. 삭제 <2017. 8. 9.> \* 파산한 경우
  -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Q. 탈퇴에 있어 총회의 의결 또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가?

협동조합 기본법은 총회의 의결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탈퇴를 보장**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반드시 의결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각 조합의 정관으로 탈퇴 효력의 발생시점을 정할 수 있음

##### Q. 탈퇴의사의 철회 또는 재가입이 가능한가?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는 **탈퇴 철회는 불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가입은 허용되나 신규 출자금과 기존 출자금반환채권의 상계는 불가함

### 3. 탈퇴 및 제명

#### 제명

##### 법 제25조(제명)

-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4. 출자금환급청구권

### 출자금환급청구권 및 환급정지

#### 법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Q. 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 출자금이 아닌 지분을 환급할 수 있는지?

“협동조합 기본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탈퇴시 지분이 아닌 출자금이 환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을 환급할 수는 없을 것임.”

## 4. 출자금환급청구권

### Q. 이사회 의결만으로 출자금(지분)을 환급할 수 있는지?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8의2는 출자금의 환급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하였으므로 이사회 의결만으로는 환급할 수 없고, 이 경우 같은 법 제117조 제1항 제3 호 등에 따라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있음”

### Q. 지분환급청구권의 행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는지?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제3항은 **지분환급청구권의 행사기간을 2년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를 단축하는 정관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음.

### Q. 출자금의 환급을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조합원의 환급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정관은 협동조합으로부터의 **탈퇴의 자유 침해 또는 투하자본의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서, 무효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단, 명확한 선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님.

## 4. 출자금환급청구권

### Q. 출자금환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합원에게도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탈퇴 조합원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출자금환급청구권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은 탈퇴 조합원에게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다만, 조합이 지분이나 출자금을 환급하지 않는 데 대한 벌칙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탈퇴 조합원이 그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조합이 출자금을 반드시 환급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조합원이 조합에 탈퇴의 의사표시를 할 때, 그 의사표시의 내용 가운데 '출자금도 함께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는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이 출자금환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의사라면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명확하게 포기하도록 하고, 이를 서면으로 증빙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5.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법 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Q. 손실액을 부담한다는 것은 유한책임이 아니라는 의미인지?**

조합원은 **유한책임**(출자금 범위)만을 부담하므로, 탈퇴 조합원이 **탈퇴시까지 이행하지 않는 출자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실액을 부담할 수 있음”

## V.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

[법 제4장 제3절]

## 임원

### 법 제34조(임원)

-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 임원의 임기

### 법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임원의 임기는 언제 개시되는 것인지?

법인 임원의 임기는 등기일이 아니라 **총회 의결 및 취임승낙일**부터 개시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법인은 설립등기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어서(민법 제33조), 설립등기 이전에는 아직 법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임원의 임기 역시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음. 법원 역시 창립총회에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설립등기시부터** 기산됨”

### Q.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는지?

이사와는 **위임계약관계**이므로,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등기여부와 무관하게 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소멸됨. 단,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임이사 선임시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할 수 있음.

### Q. 임원 임기 만료 후 인원 변동이 없다면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임원의 임기만료 후 연임하는 경우 중임등기를 진행하여야 함

## 임원

### Q. 임원이 사임하는 즉시 조합의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잃는 것인지?

이사장이 사임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의 사무에 관한 긴급처리권을 가질 수 있음. 민법은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은 위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하여 수임인의 '긴급처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 681조), 이는 협동조합에도 준용됨(협동조합 기본법 제14조 제1항, 상법 제287조의18, 상법 제195조, 민법 제691조).

즉,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그 직을 물러난 후에도, 후임자가 정하여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임. 다만, 임기가 남아 있는 다른 이사가 있고, 그에 의하여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직무수행권이 없으며, 당연히 퇴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938).

참고로 상법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퇴임하는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386조 제1항), 이는 협동조합에 유추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 임원 등의 결격사유

### 법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삭제 <2021. 1. 5.>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임원의 의무와 책임

### 법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 임원의 해임

### 법 제40조(임원의 해임)

-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이사장 및 이사

### 법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 Q. 공동이사장의 선임이 가능한지?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제1항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를 둔다고 하였으므로, 공동이사장의 선임은 원칙적으로 불가

## 이사장 및 이사

**Q.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반드시 조합원이어야 하는지? 조합원 아닌 이사장은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지?**

협동조합 기본법은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함(법 제28조 제2항, 제34조 제3항). 표준정관례는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이사는 총수의 5분의 1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고 정함(표준정관례 제47조 제1항). 따라서 **현행법상 이사장이 반드시 조합원일 필요는 없음**. 다만, 비조합원 이사장의 경우 조합원이 아니므로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질 수 없음.

## 감사

### 법 제42조(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감사의 대표권

### 법 제43조(감사의 대표권)

- ①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한다.

## 임직원의 겸직금지

### 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 ① 이사회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이사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 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영 제10조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이 조합원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그 밖에 협동조합의 규모·자산·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Q.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반드시 근로자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본법상 임직원 겸직금지규정이 있어서 고민입니다.

인증심사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반드시 이사회일 필요는 없음. 정관이나 규약으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등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를 두고 여기에 근로자대표 등이 참여하게 되면 해당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될 수 있는 지?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에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함(「상법」 제397조 제1항). 「상법」상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상법」 제169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의미함. 사회적협동조합은 「상법」상 회사가 아니며,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아니하므로, 겸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사회적협동조합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은 이사장이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동법 제44조 제1항), 이사장이 '주식회사'의 이사를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율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VI.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법 제4장 제4절]

##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제한

### 법 제93조(사업)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시·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제한

### 시행령 제21조(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3조제1항제1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 가.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 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 다.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 가.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 법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사업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22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 소액대출 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함.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고려하여 정함.
- 소액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함.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음.
- 소액대출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함.

### 시행령 제23조(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 조합원들이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각자 나누어 낸 상호부조회비를 적립금으로 하여,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함.
- 상호부조금의 지급 사유와 사유별로 지급되는 상호부조금의 한도, 상호부조계약과 상호부조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함.
- 상호부조를 위한 적립금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함.

## 조합원 아닌 자의 사업이용

**법 제95조(사업의 이용)** 사회적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 제외사업 :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의료 사업**", "그 밖에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시행령 제25조(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조합원 아닌 자 : "**응급환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한부모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혼이민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사람**",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보건·의료사업 총공급량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있는 사람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총공급량을 산정함.

## 공공기관 우선구매

### 법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VI.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 등

[법 제4장 제5절]



# 1.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 법 제47조(회계연도 등)

- ①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법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결산보고서

### 법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운영 및 경영의 공개

### 운영의 공개

- \* 운영의 공개 :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조합원 명부”, “회계장부”,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위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함.
  -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위 사항이 포함된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청구 가능

### 경영공시

-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
- 경영공시 대상: 정관,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보고서,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상황, 사업결과 보고서
- 시기: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

### 3. 적립금 및 잉여금의 배당

#### 적립금 및 잉여금 배당

##### 법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 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9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 3. 적립금 및 잉여금의 배당

Q. 총회의 의결 없이 이사장이 임의로 배당금액과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지?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음(「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제2항).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잉여금처분안'이 포함되어(동법 제52조 제1항), 협동조합은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동조 제2항). 이때 정기총회의 결산보고서 승인에는 이익배당의 결의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즉, 총회에서 잉여금처분안이 포함된 결산보고서를 의결함이 없이 이사장이 임의로 배당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한다면, 이는 잉여금 배당의 절차에 관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3. 적립금 및 잉여금의 배당

Q.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소속직군에 따라 잉여금을 차별하여 배당할 수 있는지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 제3항). A직군 조합원과 B 직군 조합원은 협동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종의 '직원조합원'으로 볼 수 있음. **직원조합원의 입장에서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것이라 함은 직원조합원이 그 협동조합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귀 조합은 A직군 조합원과 B 직군 조합원의 이용실적 판단에 있어서 노동시간 등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배당을 실시하여야 함.

만약 '이용실적'이 아닌 '소속직군'만을 배당기준으로 하여 특정 직군에 속한 조합원에게는 배당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다른 직군에 속한 조합원에게는 상당액의 배당을 실시한 경우, 이는 위법한 배당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음.



## 법무법인 더함

➤ 신재윤 변호사



##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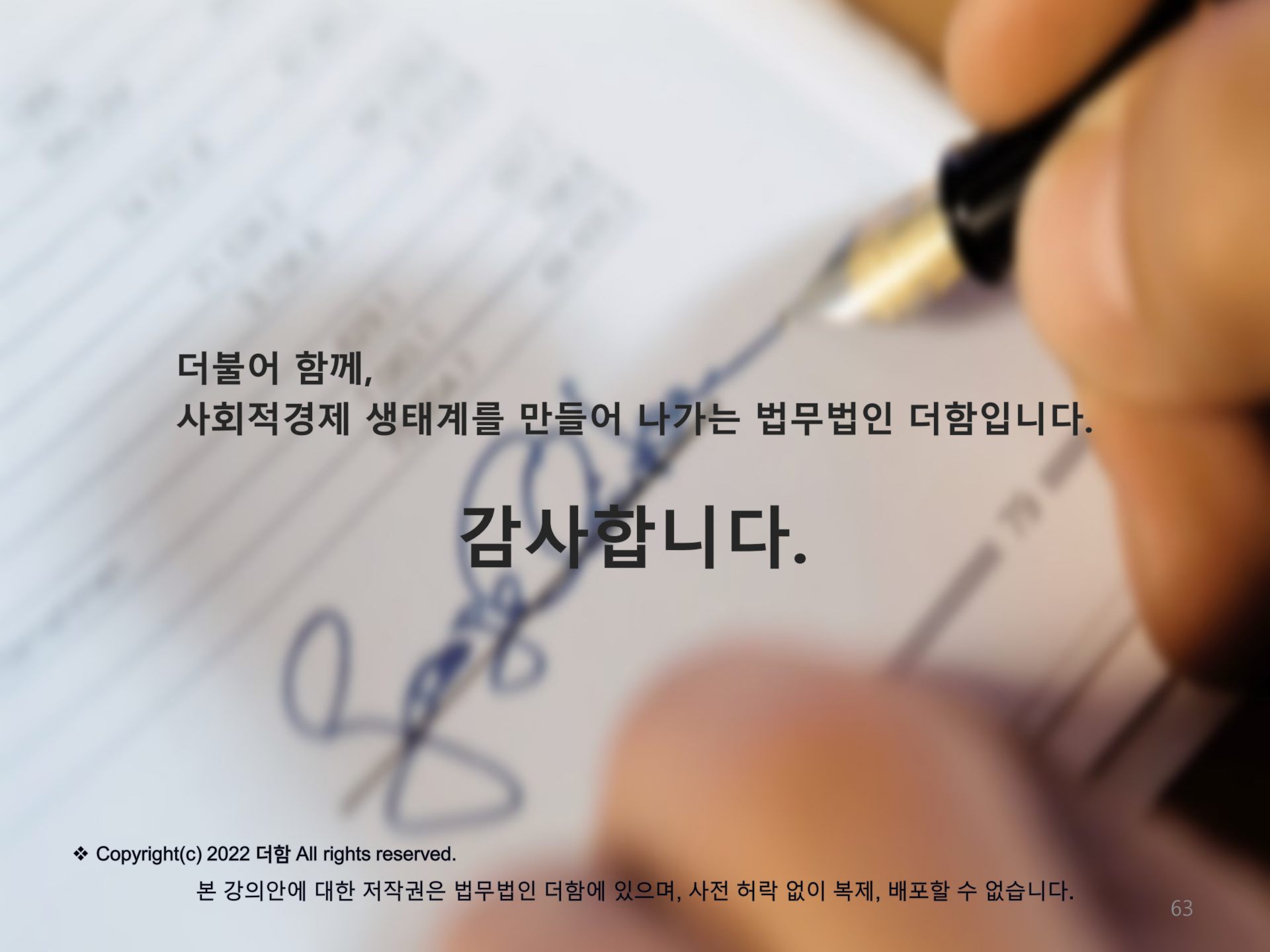
02-6384-5500



jy.shin@selaw.co.kr



www.selaw.co.kr



더불어 함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법무법인 더함입니다.

**감사합니다.**

❖ Copyright(c) 2022 더함 All rights reserved.

본 강의안에 대한 저작권은 법무법인 더함에 있으며, 사전 허락 없이 복제, 배포할 수 없습니다.